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컨퍼런스

경제위기와 극복: 회복력 강화, 구조 개혁
그리고 아태지역의 자유무역
(Economic Crisis and Recovery: Enhancing Resilience,
Structural Reform, and
Freer Trade in the Asia-Pacific Region)

2009년 10월 9-10일
싱가포르

주요논의 결과

1. 개요	1
2. 프로그램	1
3. 세션별 주요 내용	3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1. 개요

- 2009년 APEC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주최로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컨퍼런스가 지난 10월 9-10일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제위기와 극복: 회복력 강화, 구조 개혁 그리고 아태지역의 자유무역(Economic Crisis and Recovery: Enhancing Resilience, Structural Reform, and Freer Trade in the Asia-Pacific Region)』을 주제로 열림.
- 5개의 전체세션과 4개의 동시세션 그리고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세계경제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를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하고 향후 경제 회복 및 성장과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음.
 - 주요 연사로 유수프 와난디(Jusuf Wanandi) PECC 공동의장, 웅 켕용(ONG Keng Yong) 싱가포르 정책연구원장(Institute of Policy Studies), 피터 페트리(Peter A. Petri) 미국 브랜다이스대학 국제경영대학 교수, 황이핑(Yiping Huang) 북경대 및 호주국립대 교수, 요시지 노가미(Yoshiji Nogami) 일본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장, 림흥키앙(Lim Hng Kiang) 싱가포르 통상부 장관, 레이몬드 림(Raymond Lim)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 하루히코 구로다(Haruhiko Kuroda)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등 전·현직 정부 고위관료와 학계 저명인사가 참석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양수길 KOPEC 회장이 제3세션 좌장 및 동시세션 연사로 참석하였음.
 - 전체 프로그램과 주요 연사 이력 및 발표 자료는 공식홈페이지인 www.pecc.org에 게재되어 있음.

2. 프로그램

[제1세션] 아태지역의 경제위기와 회복: 현황과 과제(Crisis and Recovery in the Asia-Pacific Region: Where We Are and What Needs to Be Done)

- 사회: 찰롱콕(Chalongphob Sussangkarn) 태국개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 기조연설: 피터 페트리(Peter A. Petri) 미국 브랜다이스대학 국제경영대학 교수
- 패널:
 - 황이핑(Yiping Huang) 북경대 교수
 - 레이몬드 소토(Raimundo Soto) 칠레 폰티피시아대 경제학 교수
 - 신지 다카기(Shinji Takagi) 오사카대 경제학 교수

[오찬연설] 요시지 노가미 (Yoshiji Nogami) 일본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장

[제2세션] 지역 관점의 장기적 대응방안: 지역 전체의 회복력 강화와 재정 및 구조 개혁
(The Region's Longer Term Response: Fiscal, Structural and Other Reforms to Enhance Regional Resilience)

- 사회: 요시지 노가미(Yoshiji Nogami) 일본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장

- 기조연설: 하루히코 구로다(Haruhiko Kuroda) ADB 총재
- 패널:
 - 뮈클 애쉬어(Mukul Asher)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행정학교수
 - 아키라 코사카(Akira Kohsaka) 오사카대학교 국제정책학 교수
 - 존 웨스트(John West) ADBI 역량개발부 선임컨설턴트

[제3세션]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와 아태지역 (The Asia-Pacific in the New Global Governance)

- 사회: 양수길 KOPEC 회장
- 기조연설: 로돌포 세베리노(Rodolfo C Severino) ASEAN 연구센터 회장
- 패널:
 - 스테이플턴 로이(Stapleton Roy) 키신저 중미관계연구센터장
 - 히토시 다나카(Hitoshi Tanaka) 일본외환센터 연구위원
 - 쑨저(Sun Zhe) 중국 칭화대학교 중미관계연구소장

[제4세션] APEC 지역의 무역 아젠다(An APEC Trade Agenda)

- 사회: 로버트 스콜레이(Robert Scollay)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APEC 연구센터장
- 기조연설: 마리 팡게스투(Mari Pangestu)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
- 패널:
 - 데이비드 스펜서(David Spencer) 전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 및 WTO 대사
 - 나롱차이 아크라사니(Narongchai Akrasanee) 태국PECC 회장, 태국수출입은행 회장
 - 크리스틴 폴슨(Kristin Paulson) 미상공회의소 아태지역센터장
 - 래비 메논(Ravi Menon) 싱가포르 산업통상부차관

[제5세션] APEC 지역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환경 아젠다 (An APEC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vironment Agenda)

- 사회: 토미고(Tommy Koh) IPS(Institute of Policy Studies) 회장
- 기조연설: 에밀 살림(Emil Salim) 인도네시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고문
- 패널:
 - 스티븐 호웨(Stephen Howes) 호주국립대 아태지역학 교수
 - 리처드 드로브닉(Richard Drobnick) 남캘리포니아주립대 경영학 교수
 - 마오 시양치양(Mao Xianqiang) 북경보통대, 환경대 환경경제학과장

[오찬연설] 청 시웨이(Cheng Siwei) 중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명예회장

[동시세션 4] 신흥경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정책 (Green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Emerging Economies)

- 사회: 도널드 캠벨(Donald Campbell) 캐나다 아태지역연구원 전문위원
- 기조연설: 양수길(Soogil Young) KOPEC 회장
- 패널:

- 리포운(Lee Poh Oon) 동남아연구원 연구위원
- 티와리(S Tiwari) 동남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 안소니 친(Anthony Chin)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 최고위과정 학과장

[라운드테이블] 지역기구협력체 구조 설계 전망 (The Future of Regional Institutional Architecture)

- 사회: 유수프 와난디(Jusuf Wanandi) PECC 의장
- 기조연설: 하디 소사트로(Hadi Soesastro) 국제전략연구소 수석경제학자
- 패널:
 - 알란 진젤 (Allan Gyngell) 호주 국가평가원장
 - 히토시 다나카(Hitoshi Tanaka) 일본외환센터 선임연구위원
 - 친 야칭(Qin Yaqing) 중국 외교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
 - 토미 고(Tommy Koh) IPS 회장

3. 세션별 주요 내용

[제1세션] 아태지역의 경제위기와 회복: 현황과 과제(Crisis and Recovery in the Asia-Pacific Region: Where We Are and What Needs to Be Done)

- 경제위기 극복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세션으로서, 찰롱폼(Chalongphob Sussangkarn) 태국개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의 사회 하에 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위기 극복 현황과 지역 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됨.

□ 기조연설: 피터 페트리(Peter A Petri) 미국 브랜다이스대학 국제경영대학 교수

- 올해 3월 PECC SOTR 오사카 회의에 참석한 중국, 캐나다, 동남아, 칠레, 미국, 일본 멤버들은 PECC Task Force를 결성하여 글로벌 사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위기와 기존의 성장모델 수정(rebalancing)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음.
- IMF(WEP Oct.2009)는 PECC 지역의 실질 GDP 성장률이 2009년에 저점을 찍고 deep V 모양의 경제회복을 보일 것이라 전망함.
 - IMF는 위기 후(2011-2014)의 경제 성장이 이전 수준인 2000-2007의 성장률로 회복 될 것으로 전망함.
-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3% 이하 수준이며, 이는 중국 혹은 아시아 지역의 소비 증가, 즉 수요 이동이라는 형태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음.
- 이는 중요한 변화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구조 개혁에 대한 자극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에너지를 확보해야할 것임.
 - 성장 에너지로는 기업 클러스터, 수요 진작, 시장 활성화, 정책 개발, 기술 개발, 친환경, 인력투자(보건, 교육, 안전망, 인프라), 지적 재산 강화, 생산성 증대(교육, R&D, 생산성 정책 등) 등이 있음.
-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경제위기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금번 위기가 외부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제조

업부문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임.

- 미국과 유럽의 더딘 경제회복, 높은 실업률 등이 향후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확대보다는 내수경기 부양을 통해 국내 수요 창출에 노력해야 함.

□ 황이핑(Yiping Huang) 북경대 교수

- 중국의 사례를 들어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논의함.
- 중국은 가계·기업·은행·정부 모두 회복의 신호가 뚜렷하며, 현재 8%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신용도가 크게 늘어나며(Massive credit expansion), 지난 분기 GDP 성장률이 14%에 달하는 등 큰 폭의 리바운드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하강세 있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음.
- 이렇듯 불균형 문제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Rebalancing을 위해 통화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주를 이루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소득배분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임.
- 중국은 노동 이동에 대한 통제, 자본 유입 통제, 토지의 개인 소유 통제, 유가 통제, 낮은 수준의 환경규제 등으로 요소 시장을 왜곡시켜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레이몬드 소토(Raimundo Soto) 칠레 폰티피시아대 경제학 교수

- PECC 라틴 아메리카 4개국(칠레, 페루, 에콰도르, 멕시코)의 세계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해 논의하였음.
- 금번 경제위기는 외생적인 것으로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을 봤을 때, 현재 라틴아메리카 4개국은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이 진행 중임.
- 라틴아메리카국은 거시경제 전망을 하기에 경제 규모가 너무 작고, 이러한 작은 국가는 거대 국가의 운명에 좌우되는 경향이 높음.
-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며 과거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함.
 - 멕시코와 칠레는 과거에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위기를 겪었는데, 칠레는 요소 성장성 강화, 강력한 통화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음. 멕시코는 통화 평가절하가 더 많이 되었고 임금이 더 낮았음.
 - 또한 칠레는 무역 정책을 개혁하고, 공기업을 민영화, 은행에 대한 정부개입 축소, 파산법 개혁 등의 정책 개혁이 있었음.
- PECC 라틴 아메리카 4개국은 정책을 통해 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축소시켜야 할 것임
 - 금융통합, 무역 다변화, 다른 지역과의 상호교류 증대, 성장과 복지 강화, 방어력 강화를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경제 개방 정책이 필요함.
-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이전의 위기 극복 경험이 있고 거시 경제 상황이 비교적 개선되어서, 금번 위기에는 덜 취약(vulnerable)하게 반응하였음.

□ 신지 다카기(Shinji Takagi) 오사카대 경제학 교수

- PECC 선진 아시아 6개국(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의 세계 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
- 선진 아시아 6개국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가지고 있음.
 -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모두 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으며, 수출 구조가 대외 경제 의존도를 높였고, 정책의 개입이 다른 국가보다 많음.
 - 위기 이후 호주, 뉴질랜드, 한국은 시장금리가 계속 하강하는 양상을 보이나, 그 외 국가는 안정적임.
 - 위기 이후 환율의 변동을 비교해 봤을 때, 일본 통화만 평가 절상되어 있음.
 - 호주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보고 있으며, 금리를 인상한 첫 번째 국가임.
 - 회복의 신호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선진 아시아국은 정책을 통한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고소득국으로 성장의 여지가 작기 때문에 서비스 섹터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보다 국내수요를 진작시켜야 함.
 -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대응책이 필요함.
- 지역통합 협력 문제에 있어 일본은 아세안+6의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제안하며, 이는 공동의 룰을 기반으로 한 노동력 이주 자유, 환율 협력 등에 기여해 또 다른 패자를 만드는 근린공평화 정책을 최소화 할 것임.

□ 질의응답

- 세계 경제 위기를 겪은 뒤 회복단계에 와 있는 지금, 정부는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어야 하며, 특히 이 시점은 전략 수립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때이므로 협력을 통한 장기적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어 APEC 혹은 주요 선진국의 역할 정립이 있어야 할 것임.
 -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금번 위기로 인해 알게 된 많은 정보를 활용해야 할 것임.
 -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발전이 중시되는 현 상황에서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환율시장 유연성 강화, 환경 정책, 사회보장 제도 개혁 등 정책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요구됨.
 - 미국의 경기회복관련 지수가 중요한 변수이며, 세계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함.
- 중국 정부주도 소비 진작 정책 혹은 보호주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는 일관된 차원의 대응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답변함.

[오찬연설] 요시지 노가미(Yoshiji Nogami) 일본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Japan National Committee for the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장

□ 주요 내용

- APEC이 창설되고 지난 20년간 이 지역에 두 번의 경제위기가 있었음.
 - 97년 경제위기 때에는 미국 시장에서 유동성을 제공받았으나, 2008년 경제위기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음.
-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과거에는 시장주도의 경제성장이 주된 관심사였다면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발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경제 성장보다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안전망은 강건한 성장을 보장할 것임.
 - 근면한 아시아인들은 더 안정되고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교육, 연금, 의료보장 정책들이 중요한 사안임.
- 향후 3년 간 싱가포르, 일본, 미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APEC 회의에서는 이러한 사회안전망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임.
- G-20도 중요하므로 APEC 내 참여를 통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질의응답

- APEC 회의에서 논의된 고차원적인 수준의 국제문제 해결책은 회원국 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현실에 반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연설자는 회원국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면 가능하다고 답변함.
 - APEC 회원 중 OECD 가입국인 호주, 일본, 한국은 이와 관련한 사항을 OECD 에서 유럽 멤버와 동일한 주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며, APEC도 향후에는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함.
-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2010년 요코하마에서 열릴 APEC의 주요 아젠다이기도 한데, JANCPEC은 지속가능성, 친환경, 포괄적 성장, 회복력 강화 등의 아젠다 개발을 위해 Social Resilience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 연금, 의료보장, 실업 문제 등에 대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비, 저축, 투자의 균형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
- APEC의 기능과 영향력에 관한 부정적 전망에 연설자는 APEC은 지식적 자극제로서 역할을 할 뿐이며, 결국 각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함.
 - 모든 나라는 각기 연금, 의료보장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공유 활성화시켜야 할 것임.
 - 일본은 지난 60년간 사회안전망 문제를 다뤄왔으며, 의료보장 정책이 잘 발달되어 있어 고령화 인구는 물론 모든 국민이 폭넓은 보장을 받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모범사례로 공유할 것임.
 - 하토야마 수상 역시 폭 넓은 의료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일본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의료 및 연금 제도를 개선 중이며 미래에는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라 확신함.

**[제2세션] 지역 관점의 장기적 대응방안: 지역 전체의 회복력 강화와 재정 및 구조 개혁
(The Region's Longer Term Response: Fiscal, Structural and Other Reforms to Enhance Regional Resilience)**

□ 본 세션은 요시지 노가미(Yoshiji Nogami) 일본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Japan National Committee for the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장의 사회로 경제 위기이후 세계 금융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조화와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임을 강조하였으며, 연사들은 아시아지역의 경제가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동의함.

□ [기조연설] 하루히코 구로다(Haruhiko Kuroda) ADB 총재

- 경제위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경우 금융위기라기 보다는 실물경제의 위기이며,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어, 좀 더 탄력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특히 향후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정치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정책 부분의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개방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아시아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해 스스로의 회복력을 높임과 동시에 세계전체의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아시아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빈곤층을 남겨두고서는 이루기 어렵고, 내수수요를 통한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빈곤 퇴치는 불가능할 것임.

□ 뮈클 에쉬어(Mukul Asher)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행정학교수

- 고령화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연금과 보건정책 등의 사회안전망, 즉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에 관해 논의함.
- 지속가능성과 사회안전망 문제가 조명을 받고 있으나, 아직 이슈 자체의 비중은 낮은 수준임.
-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대부분의 아태지역국가는 연금이나 보건재정 등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젊은층 노령층 모두 고용 유연성이 늘었고, 물가가 상승해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사회안전망은 더욱 중요해졌음.
- ADB는 연금, 보건 재정 등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장기적이고 유연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무역 자유화와 관련된 이슈보다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사회안전망에 대한 주된 논의가 현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더 중요함.

□ 아키라 코사카(Akira Kohsaka) 오사카대학교 국제정책학 교수

- 인구 고령화로 연금이나 의료보장 부문의 재정 부담과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됨.
 - 국가별로 다른 형태의 인구비중을 갖고 있는데 PECC 지역은 가장 빠르게 고령화

되는 지역임.

-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변화로 인한 긍정적 영향은 2010년이면 끝나고 2050년까지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임.
 - 2040년이 되면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며, 연령별 인구 비중의 변화는 고령층 대비 청년층의 불균형 문제를 가져옴.
 - 이는 노동공급, 자본 형성, 생산성 세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
- 생애 소비 대비 소득 곡선 분석 결과, 고령화 인구의 소비가 점점 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노인 인구 소비에 대한 재정 뒷받침이 필요함.
 - 이전 연구에서 직접배당금(first dividend)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공공 재정을 통한 간접 배당금(second dividend)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 인구고령화 특히 PECC 지역의 고령화는 불가피한 문제이며, 이는 경제와 정치에 도전이 될 것이나, 만일 노령 인구의 소비가 생애 소득, 저축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이는 경제 성장을 이끌 자본 형성이 되는 것임.

□ 존 웨스트(John West) ADBI 역량개발부 선임컨설턴트

- 경제위기로 실업난이 증가하고 평생고용이 없어지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교육 훈련은 매우 중요한 이슈임.
- 실업률 증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 이주자 등 소수계층이며, 특히 청년실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손해라 할 수 있음.
 - 청년 실업문제에 있어 교육훈련은 가장 중요한 해결책임.
- 오늘날 경제 위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면 구조적인 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지식/서비스 분야, ICT 분야, 환경 분야, 인구 고령화 분야 등과 관련한 산업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
 -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교육을 통한 동남아 지역 개발
 - UN 사례, 중국 사례 등에서 본 녹색 일자리 창출
 - 독일은 실버산업 관련 된 많은 새로운 직업군 창출
- 교육 문제는 전 세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정부는 사회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함.
- 또한 정부는 이미 많은 정책들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험을 서로 공유 하는 것이 필요함.

□ 질의응답

- 세계 경제위기 극복의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과 관련한 아시아 지역의 과제는 무엇인지, 사회 안전망이 동아시아 지역 불균형 문제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있었음.
- 아시아 지역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rowth Gap이 있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사회적 안정감을 위협해 정치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함.
-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과 구조 개혁에 대해 더 넓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는 개도국으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고, 정치적 안정도 낮은 수준임.
 - 이러한 문제들이 다음세대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교육 문제, 인구 고령화 문제, 환경 문제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이슈와 기업 환경의 효율성 문제, 노동력 이동 등 아시아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슈의 구조 개혁이 필요함.

[제3세션]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와 아태지역 (The Asia-Pacific in the New Global Governance)

□ 본 세션은 양수길 KOPEC 회장의 사회로 최근 경제 위기이후의 변화, 특히 신체제인 G-20와 기존 지역 혹은 세계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과 각국 정부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기조연설] 로돌프 세베리노(Rodolfo C Severino) ASEAN 연구센터 회장

- 금융, 무역 등 각 분야별로는 일정부분 존재할지 모르나, 세계 통합적 관점에서 글로벌 지배구조(governance)라는 것은 실체하지 않음.
 - 글로벌 관점의 안정망 설계(global security architecture)는 현실 적용이 어려움.
- 냉전 종식 이후 우르과이 라운드, GATT와 WTO 창설, 중국의 부상, 인도의 개혁 등이 있었고, 동남아 지역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베트남의 저항 이후 동남아의 경쟁력과 정치적 결합을 위해 지역경제 통합을 결정하고 ASEAN을 창설하였음.
- 현재는 미-중, 중-일, 한-일, 인도-중국과 같은 양자 관계 중심의 닫힌 지역공동체 체제가 우세하며, 경제적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아태지역은 종교, 문화, 민족, 경제, 정치, 역사, 국익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함.
 - 현재 명확한 동맹이나 블록이 없고, 이 지역 내 미국의 역할도 불분명하며,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형국임.
- ASEAN은 신뢰 구축을 위해 대화채널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3, East Asia Summit 등을 창설해 미국과 중국, 더 넓게는 호주, 뉴질랜드를 개입시켰음.
- 아시아지역에서 현재까지 ASEAN을 대체할 만한 조직은 없으며, 지금까지 충분히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어, 더 강력한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안보와 경제를 모두 관할하는 다른 포괄적인 협력체제는 불가하며, brick- by brick 설계만이 가능함.
 - 다른 체제는 그 기능과, 정당성에 의구심을 제기 받을 것임.
- 현재의 균형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 균형은 지속되어야 하나, 변화하는 환경에 역동성이 요구됨.
 - ASEAN은 ASEAN+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East Asia Summit 등과 같은 변화를 하였음.

- 그러나 세계 거버넌스에 있어 아시아지역에 단일 체제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함.
- 아태지역은 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통합적인 지배구조체제 창설은 불가하나, 특정 문제를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다루는 체제가 요구됨.
 - G-20체제는 효율적이고 정당성 있는 체제이나, UN의 대부분의 멤버가 참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기구가 되기에는 충분치 않음.
 - 하나의 체제가 다른 체제를 제압해서는 안 될 것임.

□ 스테이플턴 로이(Stapleton Roy) 키신저 중미관계연구센터장

- 최근의 경제위기,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제위기로 인해 새로운 체제의 경제 협력조직체가 생겨나고 있는 지금은 매우 중요한 이행의 시기임.
 - 이러한 이행으로 아시아 지역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의 부상을 예로 들며, 글로벌 경제위기로 동아시아 지역이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차별화되고 있음을 강조함.
 - 국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슈퍼파워로서 기존의 강대국인 미국, 일본의 위치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은 북한이라는 외교적 위협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위협이 있으며 일본의 경우 세계무대에서 파워가 줄고 있음이 명백함.
- 아시아지역의 지역안보 도전과제로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간 통합의 어려움, 북한 핵문제, 환경 문제 등이 있음.

□ 히토시 다나카(Hitoshi Tanaka) 일본외환센터 연구위원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보급은 매우 성공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더 포괄적이며 더 강력한 경제협력 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G20 체제는 정당성(legitimacy)을 가짐.
 - 그러나 선진국이 환경이나, 개발원조 등에 더욱 많은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G7도 유지되어야 하며, G7체제 유지로 선진국이 기술이전이나 개발 원조에 더 많은 책임감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함.
- 동아시아지역에는 EU와 같은 경제 지배구조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나, 미래 번영을 위해 상호 의존성 강화가 되어야 함.
- 동아시아지역은 법적구속력을 가진 다층(multi-layered) 체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APEC에서 한 단계 발전한 OECD 유형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가 필요함.
 - 강성안보(hard security), 연성안보(soft security), 경제 통합과 관련한 무역 이슈, 시장경제 정책조정(coordination of market economic policy) 이 4개의 측면에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함.

□ 쑨저(Sun Zhe) 중국 칭화대학교 중미관계연구소장

- 글로벌 지배구조(governance)와 G20, G7, G4(미국, 유럽, 중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논의함.
- 중국은 이제 글로벌 영향력을 갖추었으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제 협력을 할 준비가

됐음.

- 경제위기는 경제 신흥국가에게 세계 경제무대에서 중요 역할을 할 기회를 주었으며, G20은 이러한 개혁을 수행할 플랫폼이 될 것임
- 미국은 오랫동안 해온 일을 중국은 이제 시작했지만 성과가 좋음.
- 중국정부는 환율정책의 조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 달러가 기축이 되는 현 세계 금융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화로서 중국통화가 역할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됨.
 - G-20은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한 좋은 장을 마련할 것임.

□ 질의응답

- 중국과 일본의 주장이 상호 양립 불가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으나, 이 지역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일본은 중국과 경쟁을 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협력을 강화할 것임.
-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동일주제로 이뤄지는 빈번한 국제회의에 대해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나, 각 체제의 기능을 명확히 하면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임.
 - 이상적인 경제 체제 창설은 불가하며, 특정문제를 다루는 적합한 특정 기구가 필요하므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APEC을 포함해 5~6개 정도의 다른 성격의 공동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충분함.
- CEPEA, ASEAN+3가 통화 협력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기구가 경제위기 대응에 있어 IMF를 대체할 수 있는 AMF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 미국의 쇠퇴가 명백해 지는 현 시점에서 기축통화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더 강력한 통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통화(RMB)나 일본통화(JPY)는 아직 그 역할을 수행할 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함.
-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문제에 대해, 세계 혹은 지역 수준의 경제통합체제에 있어 다양한 가치나 이익구조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기구 자체가 세계 균형을 이뤄내는 것이 불가능함을 설명함.

[제4세션] APEC 지역의 무역 아젠다(An APEC Trade Agenda)

- 본 세션은 로버트 스콜레이(Robert Scollay)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APEC 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아태지역의 무역현안과 경제협력기구의 역할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됨.

□ [기조연설] 마리 팡게스투(Mari Pangestu)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

- 아태 지역 모든 국가, 특히 중국과 인도는 큰 폭의 경제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에는 더 큰 성장이 예상됨.
 - 무역 보호주의가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 침체시기에도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았음.
-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신뢰 구축과 구조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나, G-20, APEC 등의 기구에서 논의된 주제가 개별국가 정부 수준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보호주의 압력을 받음.

- 정책을 통한 신뢰구축과 적절한 시기의 출구전략, 자유무역체제 유지와 투자 유치 확대가 필요하므로 금번 컨퍼런스에 이러한 것을 논의하고, DDA에서 논의된 주제를 명확히 했으면 함.
 - 보호주의 완화, WTO 프로세스 등 무역 아젠다와 관련해 국제무역기구, 혹은 지역 경제협력체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실행되도록 해야 함.
- 경제위기 이후 미국은 더 이상 경상적자를 감수하면서 세계경제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APEC 지역의 무역 정책 기조(Regime)에도 변화가 요구됨.

□ 데이비드 스펜서(David Spencer) 전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 및 WTO 대사

- 동아시아 지역은 ASEAN, APEC, OECD 등의 경제 협력기구 혹은 일방(unilateral), 양자(bilateral), 다자(multilateral) 체제 등 전 방위적 차원의 무역 정책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어 왔음.
 - 최근에는 자유무역 협정의 범위를 확대해, 동아시아 자유무역의 후생이 호주와 뉴질랜드, 태평양 지역의 더 넓은 시장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있음.
- APEC은 소규모 사무국이며,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시장 지향적 기구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G-20 아젠다 및 도하라운드, 코펜하겐 협약 등 국제협력체제 지원
 - 국가 내 보호주의 압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 자유무역지대협정(FTA) 활성화와 관련한 기업 활동 투명성 강화 지원
 - 무역과 투자 촉진
 -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지원 등

□ 나롱차이 아크라사니(Narongchai Akrasanee) 태국PECC 회장, 태국수출입은행 회장

-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각국 신정부의 움직임에 보았을 때, 회복에 대한 신뢰가 크다고 판단됨.
- APEC은 특히 동아시아지역에 있어 지난 몇 년간 무역 아젠다와 관련해 부분적 해결책을 제시해왔으나 2009년 시장이 침체기의 무역 구조 이슈와 관련해 보호주의가 대두되는 문제를 보여주었음.
 - 미국시장은 매우 열려있는데 반해, APEC 회원국의 수출은 60%가 역내에서 이뤄지고 있음.
- 이러한 무역구조 개선을 위해 APEC은 2015년까지 회원국의 보호주의를 통제하고, 무역 금융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임.
- 세계 경제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영역별 주요 손실(damage)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관리하는 Damage Control이 필요함.

□ 크리스틴 폴슨(Kristin Paulson) 미상공회의소 아태지역센터장

- APEC의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 목표 달성에 있어 기업분야(Private Sector)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함.
- 미상공회의소 아태지역위원회(APCAC: Asia-Pacific Council of American Chambers of Commerce)는 1968년 창설된 기구로 아태지역회원 중 19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만개가 넘는 기업체와 5만 명 이상의 기업가들이 가입하였음.
- APEC은 재계로부터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APEC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ABAC)은 아태지역의 기업공동체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이윤 추구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이익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무역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래비 메논(Ravi Menon) 싱가포르 산업통상부차관

- APEC에서는 지난 20년간 자유무역 확대와 관련한 많은 이슈들이 논의되어 왔으나, APEC은 협상기구는 아님.
- APEC 국가들 내 다자주의 혹은 양자주의 형태로 자유무역지대가 있는데, 이는 시장개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하나의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세장벽 철폐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을 줄이고 더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함.
 -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세계 평균 2~30개 기관 관계자와 그에 따른 서류절차가 필요한데 반해, 미국의 경우는 창고에서 수출 항구까지 가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음.
- 국경간의 거래가 대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더 쉽고 저렴한 프로세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질의응답

- APEC, ASEAN 등 기존 국제협력의 지배구조(governance)를 유지하면서 현재 주요 논의되고 있는 무역 아젠다 설정의 이론적 근거(rationale)를 개발해야 할 것임.
 - 지역 경제통합과 관련한 아젠다 설정에서 이슈가 되는 투자, 액션 플랜의 추진, 이니셔티브 등이 본래의 목적을 실행하도록 구속력을 갖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함.
- 다자주의 체제의 국제기구에서 주장하는 무역자유화 혹은 이와 관련해 논의된 사항을 현실적으로 민간부문(ABAC 회원)이나 정부에서 진행하려고 할 때 생기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고려해야 함.

[제5세션] APEC 지역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환경 아젠다 (An APEC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vironment Agenda)

- 본 세션은 토미고(Tommy Koh) IPS 회장의 사회로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약과 기여에 대해 논의함.

□ [기조연설] 에밀 살림(Emil Salim) 인도네시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고문

- 식량 가격 상승, 유가 위기, 인도네시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문제가 아시아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음.
- 탄소 배출량을 급속히 상승시키면서 고성장을 이룩한 중국은 반드시 동남아 지역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임.
 - 중국 향후 에너지 수요 역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높일 것임.
- 저탄소 저빈곤은 양립 가능하며, 이에 있어 개도국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의 영역에서 탄소배출량 절감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발 모델이 필요함.
 - 식량안보, 식수, 저탄소, 재생에너지,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 빌딩, 신종 질병, 재자원, 에너지 효율, 환경 관련 세제 개혁, 환경비용을 고려한 가격책정 등
- 시장실패를 정부와 시민 사회, 그리고 기업의 공동 개입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지역 협력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함.

□ 스티븐 호웨(Stephen Howes) 호주국립대 아태지역학 교수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나 환경과 관련한 국제기구에서 경제학자와 과학자 그리고 정부관계자들은 지구온난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위험 신호를 주시하고 있음.
- 중국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그 외 APEC 국가들도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 코펜하겐 협정이나, 교토의정서에 제시한 완화책은 일정부분 예전부터 예고되어 온 것이나, 이를 개별국가 수준에서 실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름.
 -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있어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큼.
 - 산업화를 기반으로 고성장을 달성한 선진국의 책임이 크므로, 환경문제 해결에 선진국이 앞장서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는 등 영향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APEC 2007 호주 회의에서는 에너지 저효율성 산업의 발전에 기반을 둔 성장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와 관련해 G7, G8에서도 유사 주제가 논의되는 등 긍정적 신호들이 있었음.
 - 무역과 규제완화에 집중해있던 APEC의 관심이 이제는 기후변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해야 함.
- 개도국도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려는 의지가 있으므로, 선진국이 나서서 이머징 국가들의 환경문제 해결에 지원을 해야 할 것임.

□ 리처드 드로브닉(Richard Drobnick) 남캘리포니아주립대 경영학 교수

- 수자원 공급과 관련해, 정부 혹은 국제 협력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시급함.
- APRU(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는 42개 대학이 가입하여 기후변화와 의료보장 정책, 지역통합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AWI(APRU World Institute)는 지역수준의 협력을 위해 각국 정부의 협력을 이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음.
 - AWI는 2009 2월 뉴질랜드 ABAC 회의에서 기후변화와 공공보건의 위협과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고, APEC 정상회담 참석자들에게 정책 조언을 한 바 있음.
- AWI는 현재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전략 (CMAS: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연구 프로그램 진행 중인데, 이는 해안지역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임.
- 학계는 지원을 받지 않으면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계수준에서도 시급한 문제인 수자원과 관련된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의 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PECC는 기구의 성격상 사업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APEC SOM, 각료회의에 제출하는 권고안을 통해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좋은 기구라 생각함.

□ 마오 시양치양(Mao Xianqiang) 북경보통대, 환경대 환경경제학과장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중국은 많은 국제 협약에 가입했으며 국내적으로도 환경 관련법과 규제를 제정하였음.
- 중국공산당은 2007년 5월 전국인민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11번째 5개년 (2006-2010) 정책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에너지 및 온실가스 농도 20% 감소
 - 이산화황 10% 감소
 - 녹지 1.8% 증대
- 이러한 정책 실행의 성과로 중국은 에너지 효율을 높였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증가시켰으며, 관련 국제협약에도 가입하였음.
 - 풍력/태양열 등과 관련한 2,023 개 CDM 프로젝트 승인, 417개 프로젝트를 UN 환경기구에 등록 등
- 이렇게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다음과 같으며, 당국은 녹색 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음.
 - 국가 내부적으로는 오염을 줄이고, 국제적으로는 책임감을 다하기 위함임
 -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음.(관련 기술 혁신 등)

□ 사회자인 토미고(Tommy Koh) IPS 회장은 기후변화 문제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임을 재차 강조하며 국제적인 협력이 상호 신뢰를 가져와 기후변화에 공동 대처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세션을 마칩.

[오찬연설] 청 시웨이(Cheng Siwei) 중국대평양경제협력위원회(CNCPEC) 명예회장

□ 주요 내용

- 1978년 마오쩌둥의 개방정책 이후 지금까지 중국은 9%이상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이는 중국의 기적이라고 까지 일컬어짐.
- 중국은 시장경제체제와 함께 사회주의도 지속시키면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보장 없이 지속가능성은 불가능함.
- 중국은 세계 경제위기라는 악조건에서도 올 상반기 7.1%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를 이끈 세 개의 축은 국내소비(+3.8% 기여), 순수출 (-2.1% 기여), 투자(+5.4% 기여)임.
- 중앙정부의 소비보조와 지역정부의 쿠폰정책으로 정부주도의 소비 진작이 있었으나, 중국의 개인신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인상, 사회보장, 신용시스템 등의 견고한 기반이 요구됨.
- 중국정부는 고성장을 이어가는 것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고성장에 대한 의지는 없으나, 향후 7~9% 수준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 확신함.
- 인간이 우선이 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 R&D, 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것임.
- 중국에 和諧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조화로운 사회, 민주적인 사회를 뜻하며 이러한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다음에 4가지 과제를 해결할 것임.
 1. 국가별 차이점을 인정하되, 개별국가의 고유성이 세계 사회의 조화를 저해하는 변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됨. 서로 존중하며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해야 할 것임.
 2. 인권, 평화, 윤리 등의 가치를 볼 때, 인간의 본성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더 많으므로 핵문제나 기후변화 문제 등을 이러한 인간본성의 공통점에 근거해 해결해야 할 것임.
 3. 상호 존중하며 다양성에 기반을 두되 컨센서스를 이뤄 공통의 소구점을 찾아내야함.
 4. 중국에서는 사업을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한데, 이처럼 우리도 차이점을 줄이고 공통점을 늘려가며 성장하기 위해 활발한 상호 교류와 의사소통이 필요함.
- PECC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로 중요한 입장에 놓여있음.
- 인간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나가며, ASEAN+1, +2, 한중일 3자회담은 모두 아시아 경제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질의응답

- 정부주도의 소비 진작 정책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한 국가의 정책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는 만큼, 저축과 소비, 내수와 수출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함을 강조함.
- 경제위기로 인해 G-20 정상회담체제가 생겨났고, 동아시아가 세계 조정위원회 무대에 동참하게 되었으므로, 6개의 아시아국가가 G-20내에서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교류, 대화를 갖고 공동 목적을 가져야 함.
 - 구체적으로 1.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동아시아 협력체 ASEAN+3를 성장시키고, 2.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고, 동남아 해수위 상승 문제도 심각하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향후 이를 보완해 나갈 협

력과제를 찾아야함.

- 세계 경제 위기보다 인간,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인 기후변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환경에 더 관심을 갖고 'stimulus package'를 마련해야 함.
 - 중국철학에 '정도를 지키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급한 건 좋지 않음.
- 중국 경제성장에 있어 실행을 통한 발전을 주장한 등소평은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와 비교해봤을 때 이러한 중국의 정치철학이 다른 국가의 모델이 되기는 어려울 것임.
 - 행동의 지침이 되는 이론이 중요하며,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필요함.

[동시세션 4] 신흥경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정책 (Green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Emerging Economies)

□ 본 세션은 도널드 캠벨(Donald Campbell) 캐나다 아태지역연구원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이 있었음.

□ [기조연설] 양수길(Soogil Young) KOPEC 회장

- 경제학적 분석에 기반해 동아시아의 녹색성장 정책 활성화를 유도(nudge)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및 PECC에 조언을 함.
- 이전까지는 경제 성장이 우선이었으나, 경제 효율화에 기반을 둔 고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음.
- UN, G8, G8+5, G20, OECD의 주요 논의사항인 '강력하고,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성장(strong, balanced and sustainable growth)'에 이어 저탄소녹색성장은 APEC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할 것임.
- 아태지역의 청정개발 및 기후변화대응 협의체(APP: 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는 APEC과 연계되어 회원국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 대안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도움을 줄 것임.
- 아태지역의 녹색성장에 있어 경제협력 그리고 기술협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리포운(Lee Poh Oon) 동남아연구원 연구위원

- 녹색 환경과 세계수준과 지역 수준의 협력에 있어, 아시아 신흥국, 특히 중국의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우리는 현재 세계 탄소 배출이 적정량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 ADB에서는 동남아시아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나, 모든 아세안 국가를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국제기구 주도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있어 특히 아태지역 대부분의 국가에는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음.
-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은 모두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통해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였으며, 개도국도 탄소 배출 삭감에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2008년 이후 배출량 1위국이나 ASEAN, APEC 정상회담 때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하는 등, 탄소배출 삭감에 더 강력한 목표를 갖고 있음.

□ 티와리(S Tiwari) 동남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문제에 있어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지난 식민 지배국을 탓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할 것임.
- 싱가포르의 최근 정부주도의 여러 친환경 프로젝트들로 인해 아시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었음.
 - 친환경 건축, 유명한 그린 프로젝트들: 특수 공법을 이용해 수위를 조절하는 마리나 독(Marina barrage), ESCAP 웹사이트에 명시된 싱가포르 리완유의 녹색 비전과 전망 사례 등
- 말레이시아 역시 강력한 녹색정책을 펼치고 있음.
 - UNIDO와 협력의지, 녹색 건물 건축, 녹색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추진 등
- ASEAN의 환경과 관련한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2020 녹색비전을 선포하였음.
- 위에 언급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ASEAN의 환경과 관련한 지역 협력은 아직 성공적이라 볼 수 없으며, 위험 지역 그리고 적응 수단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안소니 친(Anthony Chin)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 최고위과정 학과장

-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심리학과 경제학을 통섭하는 행동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함.
 - 교통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교통량은 증가추세에 있음.
 - 인간은 경제학의 전제조건처럼 가치극대화, 효율성 추구 등과 같은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행동하기 보다는 감성에 의존해 적절치 못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음.
- 인간행동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며, 심리학적인 접근법을 적용한 행동경제학으로 인간의 행동의 지침(guiding behavior)을 수립해 인간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nudge)해야 할 것임.
- 고비용이 요구되는 환경 인프라 구축보다 인간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게 중요함.
 - 차세대 녹색기술 개발은 20년 정도 걸릴 것이라 예상됨.
 - 인간은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인당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정보, 혹은 주차 가능 대수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주면 가계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할 것임. 이러한 개인수준의 에너지 감소분은 국가 수준으로 모아놓고 보면 매우 큼.

□ 질의응답

- 연사들은 더 넓은 관점에 봤을 때, 녹색 성장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속가능 성장

이 더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인간 행동에 변화를 이끌어 내야(nudging) 한다는 점에 동의함.

- 녹색성장이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부의 정책이라면, 녹색성장의 비용 문제나 외부성과 같은 정부실패 문제가 대두할 가능성에 대해 인정함.
- 각국의 환경 역량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 간 교역이 일어나듯 탄소 배출시장에서도 이러한 역량 차에 기반을 둔 교역이 일어날 수 있음.
- 녹색 산업이 국제사회의 공급망에 변화도 가져올 것이며,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도 확대될 여지가 있음.
 - 한국의 풍력 발전기 생산을 예로 들면 국내 생산은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수입하고 있어, 한국의 전력산업 특히 풍력발전에 있어, 베트남 중국의 자원을 이용해 녹색성장을 하고 있음.

[ROUNDTABLE SESSION] 지역기구협력체 구조 설계 전망 (The Future of Regional Institutional Architecture)

□ 마지막인 라운드테이블세션은 유스프 와난디(Jusuf Wanandi) PECC 의장의 사회로 지역경제협력체 설계에 관한 PECC Taskforce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서 토론하였음.

□ [기조연설] 하디 소사트로(Hadi Soesastro) 국제전략연구소 수석경제학자

- 지역기구의 설계와 관련해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에서 2005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구해오고 있음.
- 지역협력 기구를 설계함에 있어, 지역과 기구의 성격을 정의 하고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PECC는 아태 지역의 최초 다자주의 체제이며, 해당 지역은 태평양, 그 중에서도 아시아 태평양이 중심임.
 - APEC 선진국이나 개도국도 모두 동일한 참여권을 갖는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PECC에서 APEC으로, 그리고 ASEAN PMC에서 Asia Pacific Forum 창설 등 다양한 구조로 변화해 왔음.
- APEC은 무역 투자 활성화, 자유화 그리고 경제와 기술 협력 등의 역할을 해왔으나, 신뢰 구축을 넘어서는 단계로는 가지 못하고 있음.
- 최근 APEC의 영향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들도 나타나고 있음.
 - 강성(hard)과 연성(soft) 협력으로 구분해 봤을 때, APEC은 아시아 경제위기 지원에는 실패하였고, 정치안보문제는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또한 APEC의 유효성에 대한 낮은 평가를 보여줌.
 - 기타 APEC에 대한 주요 비판으로는 일부 부적절한 회원 가입국, 아젠다의 미완성, 보고르 골 실패, 관료화, 개혁에 저항 등이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 중심의 기구, 즉 ASEAN+3, EAS 등을 부각시켰음.
- 새로운 협력체 구조 설계의 필요 전제 조건으로는 1. 지역적 전략 환경의 변화, 2. 세계

- 혹은 지역적 경제의 위기, 3. 현존하는 지역협력체제의 위기를 꼽을 수 있음.
- 상기한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현 시점에 있어 APEC은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알란 진젤 (Allan Gyngell) 호주 국가평가원장

- 호주는 지금 아시아지역 경제협력기구에서의 역할 정립에 있어 중요한 이행의 시기에 있음.
- 아태지역에는 ASEAN 창설, APEC 창설, 중국의 부상, 정보통신 혁명, 아시아 지역주의의 대두, G7이 경제 위기로 인해 G20로 변화하면서 아시아 개도국을 포함시킨 것 등 다양한 협력체가 생겨나고 있음.
- 21세기에 나타난 많은 문제들을 의사소통 채널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구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해 해결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음.
- 최근 APEC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PEC은 너무 급하게 성장해 오면서 역내 경제공동체의 중심에 위치하지 못하였음.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인도를 제외한 사례 등)
 - APEC이 설정하고 있는 의제 역시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초점이 불분명하고, 내용도 불완전함.
 - APEC은 “2010년까지 역내 선진국 회원들이 자유무역 투자체제를 완성하고, 2020년까지 이를 개도국에까지 확장”한다는 1994년 보고르 목표 달성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큼.

□ 히토시 다나카(Hitoshi Tanaka) 일본외환센터 선임연구위원

- 동아시아지역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일본이 이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해 좀 더 높은 수준의 관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세우고, 방법론을 규명하고 개발하여야 함.
- 동아시아는 넓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연결되며, 동아시아 지역에는 크게 두 개의 다른 대표적인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동남아 중심의 ASEAN, 다른 하나는 동북아 3개국 중심의 한중일 정상회담 체제임.
- 동북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우리는 기존의 기구가 안보문제, 공공재 문제와 관련한 실패 사례를 보아왔음.
 - 한국의 안보문제, 법적구속력 부재, 양자주의의 우세 등
- 시장경제 정책, 에너지안보, 환경문제, 이러한 모든 기능을 다자기구인 APEC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기능적 다자주의 접근’의 도입: 기능을 설정하고, 적절한 메커니즘을 갖춰야 할 것임.

□ 쉰 야칭(Qin Yaqing) 중국 외교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

- 지역협력 혹은 경제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기능이 요구됨.
- APEC은 아태지역의 경제공동체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창설 당시 세운 기준과 원칙을 현실에서는 정당성의 문제와 회원국 간의 격차로 인해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1-tier에 속하는 국가는 G-20의 회원국이 되었고, 2-tier에 속하는 국가는 sub-regional 기구를 창설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APEC을 대체하는 기구의 창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임.

□ 토미 코(Tommy Koh) IPS 회장

- 아태지역의 경제는 지난 20년간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위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써 많은 포럼 형태의 협력 체제를 갖고 있음.
- APEC, ARF와 같은 지역기구는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을 강화시켜왔고, 새로운 아키텍처는 APEC에 종속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기구 창설에는 반대함.
 - APEC 역내 무역 비중이 67% 이상임(더 긴 역사를 갖고 EU는 68%)
- 완벽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에 너무 많은 기구가 있어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음.
 - 각 기구들은 나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각기 고유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임.
 - APEC과 ARF는 서로 다른 주제를 갖고 있으므로, 회원국도 다를 수밖에 없음.
- ASEAN은 아시아지역의 최초 경제협력기구로, ASEAN+1에서 +3로 확장되어 왔으며, 아태지역 중심지로서 긍정적 역할을 하였음.
- 하디의 보고서 중 Core Group/Steering Group의 제안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오히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을 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질의응답

- 연사들은 다양한 기구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만장일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조(architecture)를 가진 기구의 창설은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아태지역의 전체를 조정할 기구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동아시아가 매우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 하는 것 보다는 현존하는 기구들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함.
- 새로운 지역협력체 구조 설계에 관한 이슈에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하므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하고,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 경제 위기 문제를 예로 들면, 경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G-20라는 기구가 생겨난 것임.

“끝”